



보도 일시	2022.8.26.(금) 회의 종료시(별도 공지시) 이후 사용	배포 일시	2022.8.24.(수)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책임자	과장 장원석 (044-200-2396)
		담당자	서기관 강보람 (044-200-2397)
			사무관 김지현 (044-200-2416)
			사무관 윤나라 (044-200-2452)
			사무관 신재훈 (044-200-2545)

새 정부 규제혁신 본격 추진

- 정부 출범 이후 943건 과제 발굴, 3달 만에 194건(21%) 개선 -
-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규제 혁신 △경제형벌 규정도 대폭 손질 -

- ① 앞으로는 국가유공자가 보훈보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어지고, 이를 통해 약 1만 5천여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확대(200kW 이하 → 400kW)하여, 20분 내에(기존 1시간)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 ③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개인의 요청시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실손보험 간편 청구,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 관련 기관에 직접 전송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④ 고해상도 위성영상 배포시 해상도 규제기준을 4m에서 1.5m로 완화하여, 위성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고 새로운 신산업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 【붙임1】 주요 규제혁신 사례

-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약 3달 동안 194건(21%)을 개선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749건 중에서 434건(58%)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새 정부 규제혁신 실적 및 계획 >

(단위 : 건)

총 발굴 과제 수	완료과제	향후 과제(금년 말 완료 계획)
943	194(21%)	749 (434, 58%)

- 국무조정실(실장:방문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하였다.

- 정부는 8월 26일(금) 10:00 대구광역시(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고,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주요 규제혁신 정책방향을 결정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환경규제 혁신 방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 1차 추진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 * 「환경규제 혁신 방안」(환경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 1차 추진방안」(기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별도 브리핑

<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 정부는 규제혁신이 국민 애로를 해소해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해 기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 정부는 규제혁신장관회의(5.24) 이후 각 부처청 자체발굴, 경제단체 등 민간 건의 등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7.28)를 통해 1차로 발표한 140건 외에 추가로 54건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194건(21%)의 과제를 개선 완료하였다.

< 완료과제 예시 >

- ✓ **국가유공자 등 기초연금 지급 확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22.8, 복지부)
 -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는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수급 범위 확대**(약 1만 5천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 예상)
- ✓ **벤처투자조합 결성 최소금액 기준 완화**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2.8 중기부)
 -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최소출자 의무금액 완화**
(총액 20억 → 10억원, 분할납시 최초 출자 10억 → 5억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22.6, 고용부)
 - 스마트안전장비, 휴게시설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인정범위 확대로 산업현장 안전성 강화

□ 현재 39개 부처청이 총 749건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 시기별로는 금년 내 완료하는 과제가 전체의 58%인 434건이다.

< 추진중 과제 총괄 >				
(단위 : 건)				
구 분	소 계	'22년	'23년	'24년 이후
소 계	749	434	256	59
■ 행정입법 과제	538	367	140	31
- 시행령	110	75	34	1
- 시행규칙·행정규칙	428	292	106	30
■ 국회입법 과제	211	67	116	28

* 행정입법 과제는 개정완료일 기준, 국회입법 과제는 국회 제출일 기준
 ※ 정책여건 변화 등에 따라 과제별 세부추진 내용과 일정 변동 가능

□ 행정입법 과제(538건) 중 367건(68%)은 연내 개선 완료할 예정이며, 개선규제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법령 정비 사항을 공유하여 관련 조례도 즉시 제·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 행정입법 과제 예시 >

✓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위성정보보안관리규정 등 개정, '22.9, 과기부)

-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기준을 4m에서 1.5m로 완화 → 관련 기업 투자·서비스 개발 촉진 및 위성정보 활용 산업 활성화

✓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 개정, '22.12, 산업부)

-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초급속까지 확대(200kW 이하→400kW), 충전시간 단축(1시간 → 20분)

✓ **국내복귀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특정활동(E-7) 사증발급 인정서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22.10, 법무부)

-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를 위해 국내복귀 기업의 해외사업장에 재직중인 외국인의 근무경력 요건 완화(학사 이상 : 1년 → 6개월, 그 외 : 5년 → 2년)

✓ **협동로봇 인증규제 완화** (협동로봇 충돌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22.8, 고용부)

- 협동로봇의 울타리 설치 면제 위해 기업이 산업표준 충족 입증 → 간소화된 가이드라인 통해 기업부담 완화

<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사례 >



- 국회입법 과제(211건) 중 67건은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특히 민생 관련 법안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신속히 논의할 계획이다.

< 국회입법 과제 예시 >

- ✓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민간참여 허용**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22.8, 복지부)
 - 의료기관에서 개인 요청시 제3의 기관에게 **개인의료데이터 직접 전송 허용** → 건강 관리 편리성 제고
- ✓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규제 완화** (국토계획법 개정, '22.12, 국토부)
 - 용도지역별 **용도 분리 원칙** → 용도 복합 통한 **융·복합 도시공간(복합용도계획구역)** 허용
 - * 구역 단위로 용도(주거·산업·업무 등) 비율과 배치 유연화, 용도규제·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 특히 이해갈등이 포함되어 있는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는 한편, 유공자(국민·기업)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규제애로를 계속 발굴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규제 혁신 방안 〉

□ 환경부는 민간혁신과 현장적용성 제고를 통해 탄소중립 전환과 국민이 누리는 더 나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3대 혁신방안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덩어리 환경규제 방향을 전환한다.** 자원순환 규제샌드박스 도입, 폐기물 규제 면제 확대* 등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열린 규제(네거티브 규제) 확대로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촉진한다.

* 소각·매립에 연 2,114억원이 소요되었던 폐기물을 혁신적으로 재활용

- 환경영향평가는 과학·데이터 활용을 통해 조사의 범위·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절차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며, 화학물질은 위험에 비례한 규제 차등·합리화로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 (2) 규제혁신을 통해 환경정책 목표를 구현한다.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여 순환경제를 구현하고, 환경표지 통합인증을 도입*하는 등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 단순 색상, 디자인 등이 다른 제품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증

- (3) 마지막으로, 화학물질-폐기물에 대한 유사·중복 규제를 일원화하고, 모호한 규정은 명확하게 정비한다.

〈 경제 형벌규정 개선 1차 추진방안 〉

- 기재부는 기업들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의 개선 방향과 1차 개선과제 32개의 추진방안을 보고하였다.

- 개선이 시급한 반면 위반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낮은 조항을 중심으로 비범죄화 또는 합리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 ① 기존 행정제재만으로도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는 형벌을 폐지, 행정제재로 갈음*하고,

* (예시) 공사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사업정지로 제재

- ② 경미한 의무위반인 경우에도 형벌 대신에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계획이다.

- ③ 위법상태 배제 및 피해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형벌에 앞서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고,
- ④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 1차 개선과제로 선정한 32개 형벌규정에 대해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 앞으로 부처별 소관 형벌규정에 대한 전수 검토 등을 통해 형벌규정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붙임1】 주요 규제혁신 사례

【붙임2】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인포그래픽)

【붙임3】 환경규제 혁신 방안(안) 주요 내용(인포그래픽)

【별 첨】 규제혁신 과제 목록 943건(완료 194 + 추진중 749)

① (완료) 국가유공자가 보훈보상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국가유공자 J 씨는 올해 65 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수급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참전 공적을 인정받아 보훈보상금을 수령해오고 있으나, 보상금 전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보다 소득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J 씨는 국가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은 것임에도, 이를 소득으로 일괄 합산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다.

올해 8 월부터는 J 씨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었다. 기초연금 기준소득 산정시 보훈 보상금의 일부 금액을 제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J 씨는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그간 국가에 대해 헌신한 시간도 합당하게 보상받고, 한층 더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지원받게 되었다.

▶ **국가유공자 등 기초연금 지급 확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22.8, 복지부)

-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는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 → 기초연금 수급 범위 확대(약 1만 5천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 예상)

② (계획) 전기차를 20분 내에 초고속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세종시에 거주중인 전기차 운전자 K 씨는 평소 집 근처에 있는 100kW 급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그런데, 400km 주행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 데 1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긴급한 충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간이 없어 자기 차를 이용하지 못해 낭패를 본 경험이 많다.

개정되는 규정에 따라 400kW 급 초급속 충전기가 설치된다면 동일한 수준까지 전기차를 충전시키는데 20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K 씨는 하루 빨리 집 근처에 초급속충전기가 설치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다.

▶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 개정, '22.12, 산업부)

-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초급속까지 확대(200kW 이하→400kW) → 자동차 충전시간 단축

③ (계획)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나의 의료정보를 확인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위험군인 50대 N씨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 P에 문의하였으나, 진료기록 제출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N씨는 유선으로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원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업무가 바빠 시간을 낼 수 없어, 몇주째 진료기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는 P사는 개인별 의료기록 등에 기반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상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민간기업의 의료기관 대상 진료기록 요청이 어렵고, 본인 동의를 얻더라도 의료기관이 민간기업과 같은 제3자에게 직접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어 사업방향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러 병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개인의 요청에 따라 제3의 기관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되면, N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내원 없이도 자신의 진료 기록을 통합하고 실손보험 청구 등을 위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P사와 같은 혁신기업들은 이러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순환을 통해 병원방문을 통한 서류발급 등 환자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 의료·건강관리 서비스가 개발·제공되어 국민들 스스로 스마트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민간참여 허용**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22.8. 복지부)

- 의료기관에서 개인 요청시 제3의 기관에게 **개인의료데이터 직접 전송 허용** → 건강관리 편리성 제고

<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 기대효과 >

사례	현재는	앞으로는
A(65세) 당뇨환자 백내장 수술 예정	- 내과병원을 방문하여 당뇨 진료 사본 발급 후 안과병원에 제출 - 당뇨약, 백내장약 등 복약 관리 어려움 - 어려운 의학용어로 진료나 검사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움	- 사본발급 병원방문 필요없이 진료기록 온라인 송부 - 복약시간 알림, 의약품 안전 점검 등 복약 종합관리 - 진료나 검사결과를 시각화하여 쉽게 이해
B(72세) 서울에서 무릎 수술 후 재활 치료 필요한 지방 거주자	- 지방 인근 병원에는 수술 진료 기록 없음 -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의료진을 방문해야 부모님 건강관리 가능	- 진료정보를 저장하여 거주지역 주변 주치의에게 재활 치료 등 관리 -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치료 상황 확인 가능 * 동의 필요
C(35세) 신장이식환자 교통사고로 의식없는 응급상황	- 응급상황에서 환자 정보 전달 어려움 - 응급환자 이송 전 사전 준비 불가	- 이송 중 환자 정보(혈액형, 질병, 투약 등) 응급실에서 확인 - 신장이식환자에 맞는 사전 치료 준비(혈액, 투약, 수술 등) 가능

④ (계획) 고해상도 위성영상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이 창출됩니다.

KAIST를 졸업해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준비중인 S씨는 해외에서 이미 41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중인 '위성영상 분석'에 주목했다. 우리나라의 위성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분석 기술도 충분하여 벤처기업 설립을 준비하던 중, 우리나라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보안처리가 필요하고 분석에 필수적인 좌표가 포함될 경우 온라인 배포가 불가능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길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되는 보안관리 규정에 따르면 보안처리 기준이 완화되어 고해상도 위성영상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좌표가 포함된 영상을 온라인으로 배포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제개선 덕에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뒤쳐진 우리나라 위성영상활용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First-mover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위성정보보안관리규정 등 개정, '22.9, 과기부)

-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기준을 4m에서 1.5m로 완화 → 관련 기업 투자·서비스 개발 촉진 및 위성정보 활용 산업 활성화

⑤ (계획)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턴기업, 한국에서도 고용 걱정 없이 기업활동을 이어갑니다.

베트남에서 완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L씨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공장을 한국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공장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작업반장 V씨와 Z씨를 한국에 데려오려고 한다. 이를 위해 국내복귀기업 지원책을 알아보던 중 전문 외국인력 관련 고용특례를 알게 되었으나, 현지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 요건이 있거나 학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V씨를 데려올 수 없어 고민이 많았다.

앞으로 비자발급 요건이 근무경력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되면, 비자발급 요건에 따르면, 현지 공장에서 4년간 근무한 V씨도 E-7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복귀한 기업은 전문성을 갖춘 관리자급 외국인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규관리자 양성 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특정활동(E-7) 사증발급 인정서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22.10, 법무부)

-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를 위해 국내복귀 기업의 해외사업장에 재직중인 외국인의 근무경력 요건 완화(학사 이상 : 1년 → 6개월, 그 외 : 5년 → 2년)

⑥ (완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듭니다.

대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건설사 C사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도입하고 싶었으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급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가 한정되어 도입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스마트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에도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허용되어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들의 보건상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22.6, 고용부)

- 스마트안전장비, 휴게시설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인정범위 확대

새 정부 규제혁신 본격 추진

-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규제혁신 완료 과제

☑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943건 과제 발굴, 194건(21%) 개선 완료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이 확대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일부는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최대 43만원)하여
기초연금 지급 확대

→ 국가유공자 1만 5천명
기초연금 신규 혜택 ☺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22년 8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로 건설현장 안전이 강화됩니다.

건설공사 시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대상에
스마트안전장비, 휴게시설 등 추가

→ 적극적인 산재예방 실시 ☺
(28.5만개소 건설현장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22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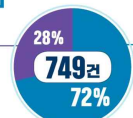
추진 중인 과제

☑ 現 39개 부처청이 749건의 과제를 추진 중[434건은(58%) 연말까지 완료]

☑ 행정입법 과제 538건 중 367건은 연내 개선 완료

☑ 국회입법 과제 211건 중 67건은 연내 국회 제출

211건
법률 개정
과제



538건
행정입법
과제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한 신시장을 창출합니다.

위성영상 배포 시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기준 완화(4m → 1.5m)

→ 위성정보 활용산업 활성화 ☺

▶ 위성정보보안관리규정 등 개정(22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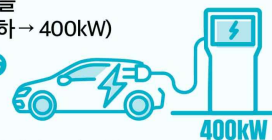


전기차 초고속 충전이 20분만에 가능해집니다.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초급속까지 확대(200kW 이하 → 400kW)

→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 ☺
(1시간 → 20분)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 개정(22년 12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합니다.

유턴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취업비자 요건 완화

→ 유턴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
국내 복귀 지원 ☺

▶ 특정활동(E-7) 사증발급 인정서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22년 10월)



본인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활성화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보험사,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에
개인의료정보 직접 전송 허용

→ 보험금 청구 및
건강관리 편리성 제고 ☺

▶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22년 8월)



